

“조선산업 매국노 이동걸·산업은행”

대우조선지회 상경투쟁 ... “현중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폐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조선산업 팔아먹는 매국노 이동걸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천막농성 보름째, 신태호 지회 수석부지회장 단식 아흐레째를 맞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산업을 망치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현 정권의 정책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통해 “이동걸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매각이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상기 지회 쟁대위 의장은 “조선산업에 호황이 온다는데 현장 노동자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는 여전히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시하기는커녕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정부가 2019년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할 때, 매각지 투쟁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3년 투쟁을 통해 계란으로 바위를 넘었다”라며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기는 투쟁 전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기 지회장은 “이동걸은 현중 재벌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노사자율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교섭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며 “지난 3년 투쟁처럼 싸우면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 즉각 폐기하라”, “경영간섭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

하라”라고 외쳤다. 지회는 ‘조선업 말살 정책 매국노 이동걸’,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노동 3권 침해 노동탄압’을 깨부수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지회는 결의대회 이후 퇴근 선전전과 투쟁문화제를 이어갔다.

대우조선지회는 “1박 2일 동안 힘을 집중해 노동자와 경남주민의 경고를 마주하고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산업은행과 이동걸을 타격해 대우조선의 생존과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같은 해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와 거제시민, 경남도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불공정 재벌 특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유럽연합 경쟁 심사 당국은 산업은행에 같은 업계 세계 1, 2위 기업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 대원강업지회 조합원 설비 킴 사고 사망

사측, 안전조치 미시행 ... 일주일 새 금속노조 조합원 두 명 산재 살인 당해

10월 27일 오전 대원강업 창원 1 공장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원강업지회 배 아무개 조합원이 설비에 끼여 숨졌다. 앞서 10월 20일 충남 한국지엠 보령공장 이 아무개 조합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대원강업 창원 1공장 판스프링 가공반에서 배 아무개 조합원이 판스프링을 가공하는 설비에 끼여 있는 현장을 동료 노동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7일 9시 15분에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배 아무개 조합원은 혼자 설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설비의 작업표준에 2인 이상 작업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원강업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고 설비에 인체 감지 센서는 없었고, 제품 인식 센서만 있었다. 설비 중단 비상정지 버튼도 없었다.

대원강업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급하게 설치를 시작한 안전펜스는 미완성에, 센서나 잠금장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설비 본체나 설비 주변에 안전 매뉴얼을 부착하지 않았다. 컨베이어벨트에 옷이나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해당 설비는 제품의 사양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가 수시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설비 청소·검



사·수리 등 작업 시 전원 차단 ▲ 설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 ▲출입문 안전 플러그와 센서 설치 등을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대원강업 사업주는 수십 년 동안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10월 28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명백한 살인행위 대원강업 협착 사망사고 책임자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대원강업 작업표준에 전원차단 후 설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며 “사측이 작성한 유압두권기(사고 설비) 작업표준은 부실했고, 작업표준에 명시한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매년 한 차례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원강업은 3년에 한 번만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라며 “막을 수 있는 죽음

을 사측이 저지른 셈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 역시 이번 사고에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2년 전 대원강업 현장에 방문했다. 당시 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안전조치가 허술한 현장을 직접 봤지만, 지적이나 개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 묵인하고 방조한 노동부가 공범이다”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는 대원강업에 ▲노동자들과 유족에 사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징계 ▲노동자 의견 반영 안전조치 즉각 시행 ▲안전작업표준 제대로 작성·교육 시행 ▲노동자 참여 위험성 평가 시행 ▲트라우마 치료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대원강업 사업주를 구속하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개선계획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